

민주, 김건희 의혹·특별감찰관 임명 놓고 정부여당 맹공

박홍근, 국민의힘에 “특별감찰관 추천 시지” 제안 김성한 “헌법 11조 김건희에 적용 안돼...성역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 관련 제기된 의혹에 대해 맹공하며 특별감찰관 추천을 시작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의혹은 특별감찰관으로 수습 가능한 수준을 이미 넘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한다 해서 더 이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게 대비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추천이 대통령실의 각종 의혹을 덮는 방패막이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오히려 민주당 등 야당이 제출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과 전혀 관계없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특별감찰관 임명과 연계하는 구태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다.

김성한 정책위의장은 “허위경력 의혹으로 수사받는 영부인이 경찰과 간담회를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사회적 신분으로 인해 차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 계급 제도를 인

정하지 아니한다는 게 대한민국 헌법 11조의 핵심 내용이다. 그런데 헌법 11조가 김건희 여사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시효가 연달까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종결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국민대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집단지성이라고 면죄부를 받았다. 김건희 여사와 사적 인연이 있는 사업체가 대통령 관저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 많은 의혹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나 해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공화국 헌법에는 성역이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김건희라는 성역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역사에서 절대 성역은 반드시 절대 부패로 연결되게 돼 있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성역을 막아내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의 정신을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녁’에 출연해 “특별감찰관 만들자는 건 정정하지는 않겠어 아니지 않나. 본인들도 걱정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때

문에 지지를 떨어질거란 얘기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고 있다”며 “야당 입장에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되는 일이다. 저희들 입장에서 특별감찰관이 없이 김건희 여사가 계속 사고를 치는 게 더 재밌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을 도입하자는 건 김건희 여사를 잘 감시해서 정권발 게이트나 비리가 없게 하자는 취지다. 적어도 대통령실 안에서 감시하고 정보를 모아서 이분을 잘 견제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판단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본인들에게 좋은 일인데 왜 거기다 다른 조건을 붙이나.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하기 싫은가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 위원장은 “지인을 1호기에 태운다거나, 자기하던 사업체 종사자를 대통령실로 끌고 간다거나, 도용받던 인테리어 업체에 관저공사를 맡긴다거나. 과거에는 발견하기 어려운 유형”이라며 “어떤 것들은 상당히 위험한 이권 개입, 인사 개입의 소지가 있다. 대통령 외교 문제에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특이하다는 수준을 넘어 국가 운영에 있어서 약간 위험한 정도의 개입이 있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문제를 연계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연계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북한인권재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사는 나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칙으로 보면 야당이 (특별감찰관을) 추진토록 하는 게 맞다”며 “야당의 주도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합의해 3명의 추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같은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도 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김 의원이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이 당론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문제는 당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에게 이 수사를 그대로 맡겨놓으면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겠다는 우려가 당내에 굉장히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및 허위 경력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의 이유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학력 위조 의혹 및 대통령실 수주 의혹 등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공관의 인테리어 공사를 초호화로 진행해 국가 예산을 방만하게 집행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사적 관계에 있는 지인의 업체에 해당 공사를 수의로 계약해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김재환기자

김기현 “이재명 민주당의 대야투쟁 맞설 진용 갖춰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세 살 깎아먹기 내전을 접고, 조속히 당의 통합과 단결을 이뤄내 이재명 민주당의 전방위적 대야투쟁에 맞설 진용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野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 거론

차기 당권주자인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헌80조 개정 이후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탄조끼만으론 불안했던지 강성 지지자들인 개딸들을 호위무사로 동원해 이 의원을 이중삼중으로 지켜내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총성 서약이 참 눈물겹다”며 “이 의원 한 사람만 바라보며 마치 당의 미래인 것처럼 당 전체가 착각에 빠진 모습이 애처롭다”고 했다.

이어 “확대명”이 되어버린 이 의원의 당 대표 선출은 대선 불복의 연장선이며 대야투쟁의 선전포고와도 같다”며 “이 의원의 민주당은 전당대회 직후 자신을 향한 국민적 우려와 비

판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윤 대통령을 향해 제2의 대선전을 방불케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유불리의 정치 논리가 아닌 사즉생의 생존 논리가 필요하고, 수성의 소극성이 아닌 총선 승리의 실효성을 확실히 할 적극성이 필요하다”며 “서로의 차이를 즐기고 서로의 공통점을 키워나가도록 자중자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헌에 ‘권리당원 전원투표는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란 조항을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최이슬기자

尹, 국힘 전당대회 시기 언급 ‘사실무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시기를 언급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 관련해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김은혜 후보수석은 23일 출입기자단에 공지를 보내 “윤 대통령은 보도와 같은 언급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비상대책위원회 등 당의 정치 일정은 국회의원 등 당원의 중지를 모아 결정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파이낸셜뉴스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지도부와 가진 만찬에서 최근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내년 1~2월 전당대회 개최에 대해 “전당대회는 무슨 내년입니까”라며 사실상 연내 전대를 통한 새당대표 선출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오유나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